

2016년 유권자 정책수요 조사

2015. 11.

제 출 문

민주정책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용역 『2016년 유권자
정책수요 조사』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11

연구책임자 : 정영무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연 구 진

- 연구책임자: 정 영 무(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 공동연구자: 한 귀 영(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 보조연구원: 오 세 인(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연구원)

[목 차]

요약	3
I. 서론	7
1. 2016년 총선에서 정책의 중요성	7
2. 조사 개요	9
II. 주요분석	10
1. 국정운영 및 정당지지도	10
2. 정책 수요	15
3. 정책 평가	21
4. 국정교과서 이슈분석	26
III. 결론	30
[부록 1] 정책수요조사 설문지	39

[그림 목 차]

〈그림 1〉 대통령 지지도	10
〈그림 2〉 지지 정당	11
〈그림 3〉 새누리당 지지이유	12
〈그림 4〉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이유	13
〈그림 5〉 정의당 지지이유	14
〈그림 6〉 우리사회가 당면한 핵심 과제	15
〈그림 7〉 우리 사회에서의 불공정 분야	16
〈그림 8〉 현재 가장 불안한 부분	18
〈그림 9〉 2016년 총선 후보 선택 기준 정책	19
〈그림 10〉 경제정책 방향 평가	21
〈그림 11〉 부동산정책 방향 평가	22
〈그림 12〉 대북정책 평가	23
〈그림 13〉 안전정책 평가	24
〈그림 14〉 노동정책 평가	25
〈그림 15〉 국정교과서 관심 정도	26
〈그림 16〉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견	27
〈그림 17〉 국정화 도입 시 균형 있고 올바른 역사 서술에 대한 기대감	28
〈그림 18〉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의 민주성 평가	29

[요약]

-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정책의 영향력은 날로 높아지고 있음. 정책은 국민들이 직면하는 삶의 불안과 고통스런 문제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지지를 끌어오는 정치세력의 주요 활동임.
- 다가오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이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설득력 있는 대안제시가 절실함. 또한 세부 계층별로 삶의 불안 요인, 절실한 정책 대안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요구됨.
- 유권자들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압도적으로 높게 꼽힌 가운데, ‘정치개혁’이 두 번째 높게 응답됨. 일자리 문제는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절박한 과제임이 확인됨. 정치개혁 없이 우리사회의 산적한 과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특히 남성층에서 정치개혁을 일자리 문제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의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됨.
-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공정성과 정의가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부상해왔음. 어느 분야에서 불공정성이 가장 극심한지에 대한 인식은 어느 분야에서 변화가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음. 우리사회에서 가장 공정하지 못한 분야를 질문한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이 가장 높은 응답을 얻은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로 인한 불공정’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은 각자가 처한 삶의 불안 요소들을 해결하는 데서 나오게 됨. 이번 조사에서 개개인이 직면한 최우선 불안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노후 불안이 가장 높은 가운데, 고용 및 일자리 불안, 빚 등 가계 부채 불안이 뒤를 이었음.

- 내년 총선 후보 선택 시 고려 정책에 대해서는, 일자리 정책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금 및 노후정책으로 나타남.

※ 연령별, 계층별 정책수요 종합 분석

		우리사회 시급한 과제	가장 공정하지 못한 분야	삶의 불안 요인	총선 후보 선택 시 고려 정책
전체		일자리, 정치개혁 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로 인한 불공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순	노후 불안이 가장 높은 가운데, 고용 및 일자리 불안, 빚 등 기계 부채 불안 순	일자리정책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금 및 노후정책으로 나타남
연령	20대	일자리 요구 특히 높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 특히 높음	고용 및 일자리 불안과 집값 전세값 상승 등 주거 불안	일자리정책이 압도적
	30대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로 인한 불공정	노후 불안에 이어 전세값 상승 등 주거 불안이 매우 큼	일자리와 노후정책이 비슷했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욕구가 타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남
	40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성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음	노후 불안과 자녀교육 불안	일자리정책과 노후정책
	50대	일자리 요구 특히 높음		노후 불안 외에도 건강 불안	노후보다 일자리정책에 대한 욕구가 더 우세
	60대 이상			노후 불안 외에도 건강 불안	노후보다 일자리정책에 대한 욕구가 더 우세
지역	서울			노후 불안 외에도	

				전세값 상승 등 주거 불안이 전 지역 중 가장 높음	
	광주/전라			노후 불안 외에도 일자리 불안이 높음	
	대구/경북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			
	부산/울산/경남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		노후 불안 외에도 일자리 불안이 높음	
	강원/제주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			
직업	자영업층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 외에도 경제성장 지속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성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성	노후 불안이 압도적으로 높음	일자리정책, 지역개발 정책 순
정치 성향	중도층/무당파	일자리 문제 외에 정치개혁에 대한 응답이 특히 높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성,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로 인한 불공정 문제		

- 연령별 : 20대는 일자리, 30대는 주거, 40대는 일자리와 노후 자녀교육 등 복합적, 50대도 일자리와 노후, 60대 이상 일자리와 건강,
- 지역별 : 서울 지역은 주거, 지방으로 갈수록 일자리
- 유권자들의 정책지향을 살펴보기 위해 경제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성장이 지연되더라도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이 성장 우선 의견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대체로 성장과 복지의 관계에서는 성장 우선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데, 성장과 불평등 간의 관계에서는 불평등해소 의견이 높게 나타남. 이는 격차와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성장은 더 이상 국민들 개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임.

- 정부 여당의 정책을 부동산정책, 대북정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 노동정책 네 분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대북정책만이 긍정평가가 유일하게 과반을 상회하는 분야로 나타났음. 그 외 안전정책(44.9%), 노동정책(35.8%), 부동산정책(28.1%)순으로 평가가 높게 나타남.

I. 서론

1. 2016년 총선에서 정책의 중요성

-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정책의 영향력은 날로 높아지고 있음. 정책은 국민들이 직면하는 삶의 불안과 고통스런 문제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지지를 끌어오는 정치세력의 주요 활동임.
- 선거에서 정책이 결정적 변수로 부각된 것은 무상급식이 핵심 이슈로 부상한 2010년 지방선거부터라 할 수 있음. 당시 무상급식으로 대두된 복지 이슈는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불안은 물론 양극화 및 불평등 심화로 촉발된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감수성을 건드리면서 선거의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 2012년 대선에서도 복지와 경제민주화 등이 여야 공히 주력한 핵심 정책이슈였고, 이것이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
- 경제위기 심화, 불평등 확산 등으로 인해 삶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선거에서 정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유권자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절실하게 요구하면서 투표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당 등 정치세력이 유권자들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정책이 무엇인지를 발굴하고 풀기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에는 지향하는 가치와 노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함. 정책에는 정치세력이 주목하는 정책문제의 우선순위, 지향하는 가치, 정책실행의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둘러싸고 정당 간 경쟁이 벌어지고 유권자도 선택을 하게 됨.
- 정당 등 정치세력의 입장에서 정책 활동이란 이슈제기와 대안제시를 넘어서서 이를 추진하고 실행할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일련의 활동임. 즉,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밀착해 해결하는 정치적 능력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설득력 있는 정책 대안과 더불어 그것을 추진할만한 역량과 능력에 대한 신뢰가 정책 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다가오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이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설득력 있는 대안제시가 절실함. 또한 세부 계층별로 삶의 불안 요인, 절실한 정책 대안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요구됨.
- 정당의 정책 활동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고조되면서 무당파층이 늘어나고 선거에 대한 관심도 저하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핵심 활동이기도 함.
- 이번 조사는 유권자들의 정책적 욕구를 세부 계층별로 점검하고 살펴보는 것이 주 목적임. 이는 만연한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정치를 복원하는 과정이기도 함.

2. 조사 개요

조 사 지 역	■ 전국
응답자 특성	■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 CATI 방식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표 본 수	■ 1,000표본 (표본 오차 : 95%신뢰수준 $\pm 3.1\%$)
표본추출방법	■ 지역/성/연령에 의한 비례할당 표본 추출 ■ RDD방식 무작위 추출
자료수집기간	■ 2015년 11월 8일 ~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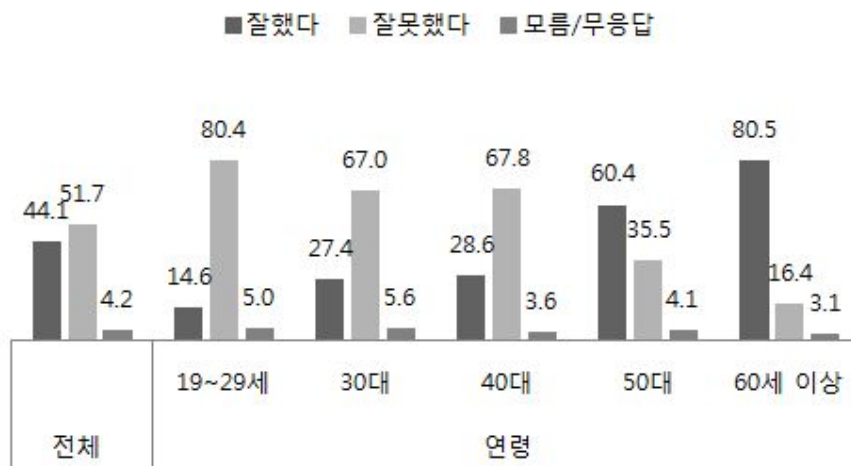
II. 주요분석

1. 국정운영 및 정당지지도

□ 대통령 지지도

<그림 1> 대통령 지지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을 잘했다고 보십니까?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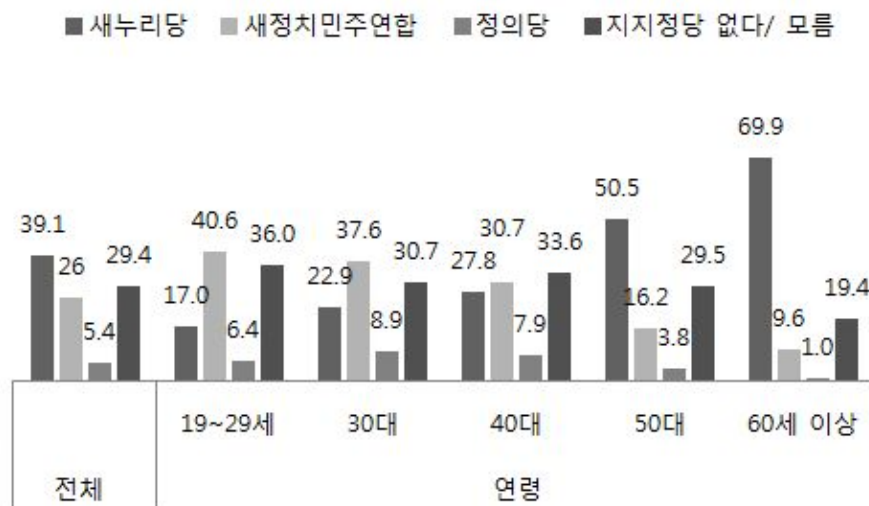


- 취임 이후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질문한 결과,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44.1%(‘매우’ 12.0%+ ‘비교적 잘한 편’ 32.1%),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51.7%(‘약간 잘못된 편’ 26.7%+ ‘매우 잘못’ 25.0%)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다소 우세했음.
- ‘잘못했다’는 부정적 의견은 여성(47.8%)보다 남성(55.7%)이, 연령별로는 20대가 80.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남. 30대와 40대도 ‘잘못했다’는 응답은 각각 67.0%, 67.8%로 매우 높았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5.6%) > 대전/충청(60.6%) > 서울(55.5%) > 경기/인천(53.8%) 순으로 부정평가가 높았음.

□ 지지 정당

<그림 2> 지지 정당
어느 정당을 가장 지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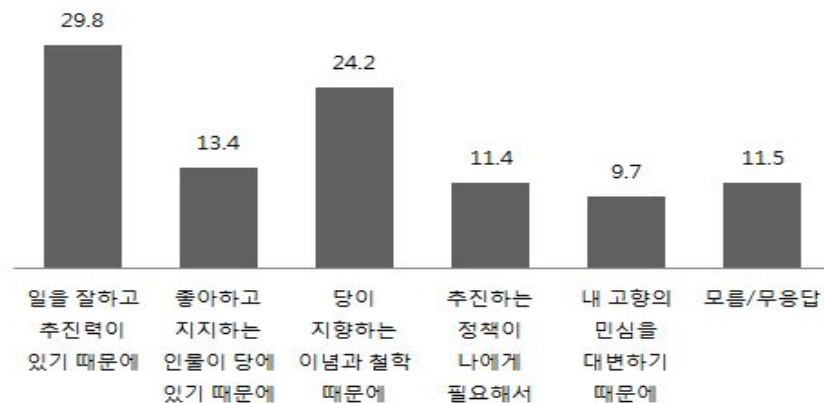
-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39.1%로 가장 높았으며, ‘새정치민주연합’ 26.0%, ‘정의당’ 5.4% 등으로 나타남. 한편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의 비율은 29.4%였음.
- 연령별로 보면 19~29세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가 40.6%로 가장 높았음. ‘새누리당’ 17.0%, ‘정의당’ 6.4% 등이었고 ‘지지정당 없다/모름’이 36.0%였음. 30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37.6%) > ‘새누리당’ (22.9%) > ‘정의당’ (8.9%) 순이었고 ‘지지정당 없다/모름’이 30.7%였음. 40대까지는 무당파층이 가장 높은 가운데 ‘새정치연

합' 이 '새누리당' 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음.

- 50대 이상에서는 '새누리당' 에 대한 지지가 50%를 상회하는 등 급격히 높아졌음.
- 지역별로는 '새누리당' 지지는 대구/경북(64.3%), 부산/울산/경남(44.2%) 등에서 평균을 상회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는 대전/충청(38.2%), 광주/전라(40.2%) 등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음.
- 한편 무당파 비율은 광주/전라(40.7%), 19~29세(36.0%), 40대(33.6%), 자영업(38.4%), 학생(34.4%), 중도층(33.6%), 이념성향 무응답층(46.4%)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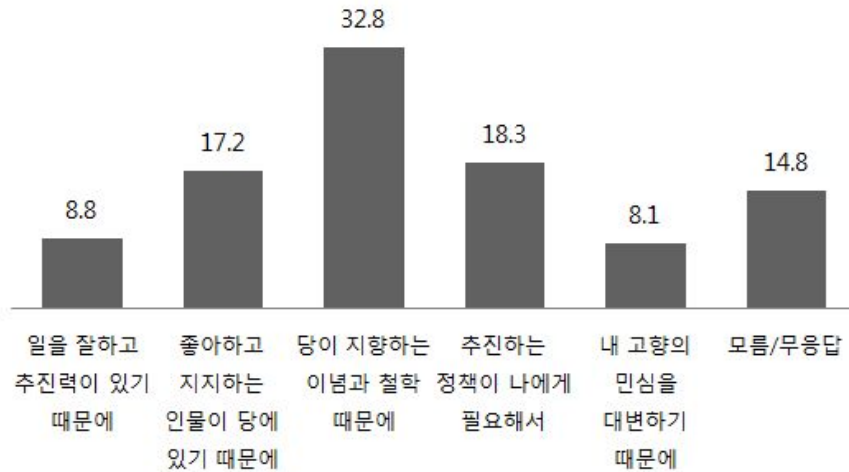
□ 정당 지지 이유

<그림 3> 새누리당 지지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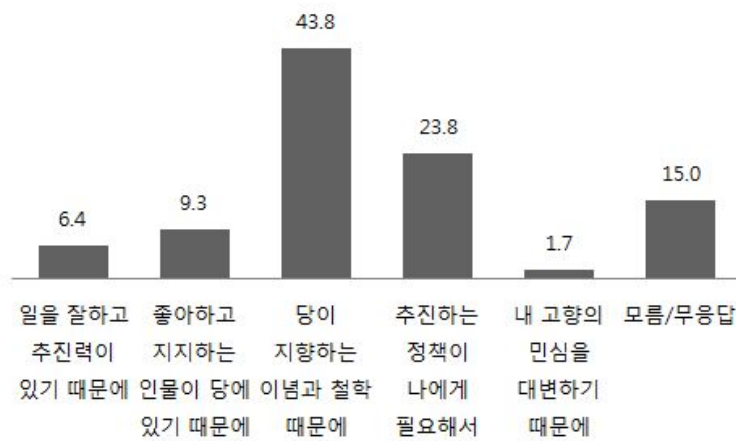
- 새누리당 지지자들만을 대상으로 지지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일을 잘하고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가 29.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당이 지향하는 이념과 철학 때문에' 가 24.2%, '좋아하고 지지하는 인물이 당에 있기 때문에' 13.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음.

<그림 4>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이유



-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이유로는 ‘당이 지향하는 이념과 철학 때문에’가 32.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나에게 필요해서’ 18.3%, ‘좋아하고 지지하는 인물이 당에 있기 때문에’ 17.2%, 일을 잘하고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8.8%로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음.
- ‘당이 지향하는 이념과 철학 때문에’ 응답은 서울, 대전/충청, 20대와 50대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음.
- ‘추진하는 정책이 나에게 필요해서’ 응답은 경기/인천, 40대, 주부층 등에서 비교적 높았음.
- ‘좋아하고 지지하는 인물이 당에 있기 때문에’ 응답은 영남권, 30대, 자영업과 화이트칼라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5> 정의당 지지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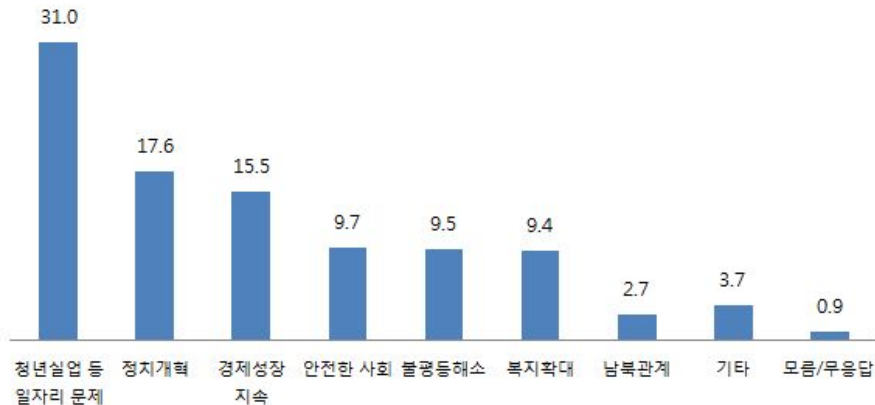
- 정의당 지지 이유로는 ‘당이 지향하는 이념과 철학 때문에’가 43.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나에게 필요해서’ 23.8%, ‘모름/무응답’이 15.0%로 나타남.

2. 정책 수요

□ 우리사회가 당면한 핵심 과제

<그림 6> 우리사회가 당면한 핵심 과제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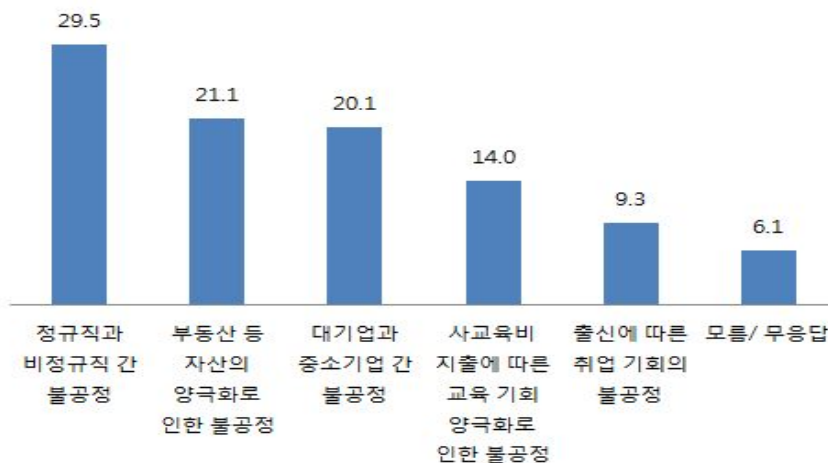
-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 라는 응답이 31.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치개혁’ 17.6%, ‘경제성장 지속’ 15.5%, ‘안전한 사회’ 9.7% 등으로 응답되었음.
- 성별에 관계없이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 가 꼽혔음. 하지만 여성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음. 그 다음 과제로 남성은 ‘정치개혁’ (23.5%)과 ‘경제성장 지속’ (14.3%)을 꼽아 ‘정치개혁’ 에 대한 요구가 전체 평균을 훨씬 상회했음. 여성은 ‘일자리 문제’ 에 이어 ‘경제성장 지속’ (16.7%)과 ‘안전한 사회’ (12.4%) 순으로 높게 응답되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 라고 응답됨. 특히 19~29세(34%)와 60세 이상(33.3%)에서 매우 높게 나타남.
- 19~29세는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 (34.0%) > ‘정치개혁’ (16.9%) > ‘경제성장 지속’ (13.6%) 순으로 응답함. 30대는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 (26.0%) > ‘정치개혁’ (19.3%) > ‘복지확대’ (16.7%) 순으로 나타남. 40대는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 (29.3%) > ‘정치개혁’ (16.8%) > ‘경제성장 지속’ (13.9%) 순이었음.
- 50대는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 (31.9%) > ‘정치개혁’ (20.8%) > ‘경제성장 지속’ (17.9%) 순임. 60세 이상은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 (33.3%) > ‘경제성장 지속’ (20.8%) > ‘정치개혁’ (14.6%) 순으로 응답해 다른 연령층보다 ‘경제성장’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불공정한 분야

<그림 7> 우리 사회에서의 불공정 분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정하지 못한 분야는 다음 중 어느 분야라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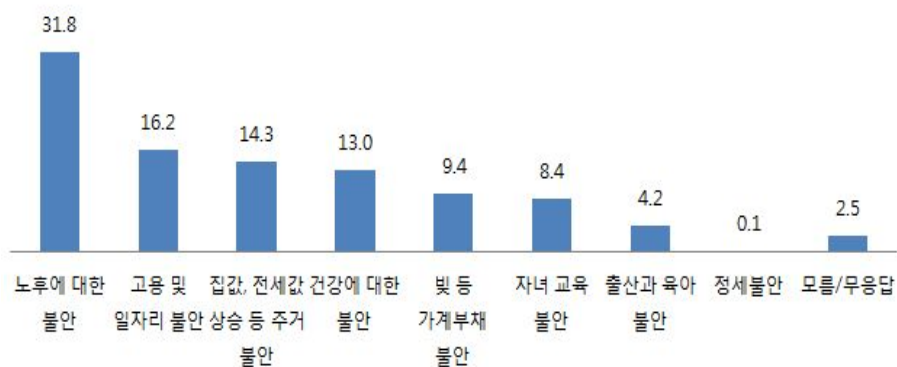
- 우리사회에서 가장 공정하지 못한 분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이 29.5%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로 인한 불공정’ (21.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20.1%) 순으로 응답되었음. 그 외,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교육 기회 양극화로 인한 불공정’과 ‘출신에 따른 취업 기회의 불공정’이 각각 14.0%와 9.3%로 나타남.
- 남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 (28.9%)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23.4%) >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로 인한 불공정’ (22.1%) 순이었음. 여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 (30.0%) >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로 인한 불공정’ (20.1%) > ‘사교육비지출에 따른 교육 기회 양극화로 인한 불공정’ (17.8%) 순으로 응답해 여성층에서 자산과 교육 기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특히 높음이 확인됨.
- 연령별로는 19~29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 (34.8%) >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로 인한 불공정’ (22.4%)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15.8%)로 나타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에 대한 응답이 전체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30대는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로 인한 불공정’ (30.2%)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24.1%)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 (23.3%) 순으로 나타나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로 인한 불공정’에 대한 응답이 특히 높음이 확인됨.
- 40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이 37.6%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사교육비지출에 따른 교육 기회 양극화로 인한 불공정’도 18.6%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 50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 (27.5%)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20.1%) >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로 인한 불공정’ (18.7%) 순이었고, 60세 이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 (24.5%)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23.8%) >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로 인한 불공정’ (18.0%) 순이었음.

-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로 인한 불공정’ 25.7%이 가장 높게 나타나 주목됨.

□ 현재 가장 불안한 부분

<그림 8> 현재 가장 불안한 부분

현재 선생님의 삶에 있어 가장 불안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현재 삶에 있어 가장 불안한 부분으로 ‘노후에 대한 불안’ 이 31.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용 및 일자리 불안’ (16.2%), ‘집값, 전세값 상승 등 주거 불안’ (14.3%), ‘건강에 대한 불안’ (13.0%)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음.
- 남성은 ‘노후에 대한 불안’ (30.2%) > ‘고용 및 일자리 불안’ (17.8%) > ‘집값, 전세값 상승 등 주거 불안’ (15.2%) 순으로 응답했음. 여성은 ‘노후에 대한 불안’ (33.4%)과 ‘건강에 대한 불안’ (14.7%)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음.
- 연령별로는 19~29세에서 ‘고용 및 일자리 불안’ (42.7%)이 특히 높은 가운데, ‘집값, 전세값 상승 등 주거 불안’ (18.1%)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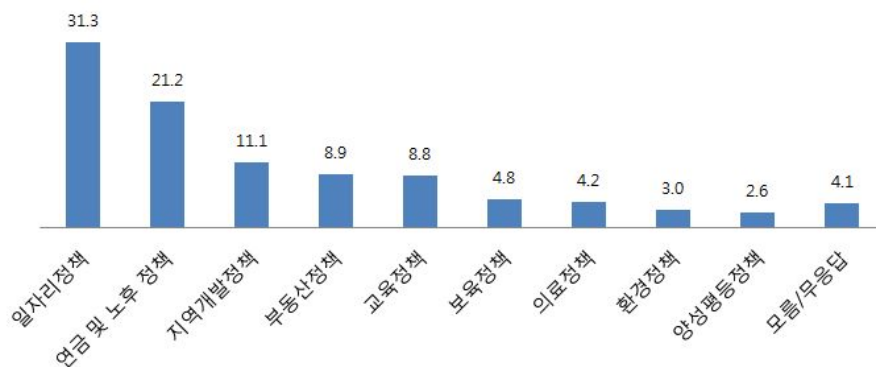
나 일자리와 주거가 20대의 가장 큰 불안 요인임이 확인됨.

- 30대는 ‘노후에 대한 불안’ (30.6%) > ‘집값, 전세값 상승 등 주거 불안’ (20.7%) > ‘고용 및 일자리 불안’ (11.7%) 순으로 나타나 ‘집값, 전세값 상승 등 주거 불안’ 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음을 알 수 있음.
- 40대부터는 ‘노후에 대한 불안’ 이 급격히 높아지는 가운데, 40대에서는 ‘자녀 교육 불안’ 이, 50대와 60대에서는 ‘건강에 대한 불안’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노후에 대한 불안’ (35.0%)이 가장 높은 가운데, ‘집값, 전세값 상승 등 주거 불안’ 이 전체 평균 이상으로 높았음.
- 광주/전라 등 지방으로 가면서 ‘고용 및 일자리 불안’ 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주목됨.

□ 총선 후보 선택 기준 정책

<그림 9> 2016년 총선 후보 선택 기준 정책

내년 4월 총선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정책을 가장 많이 고려할 것 같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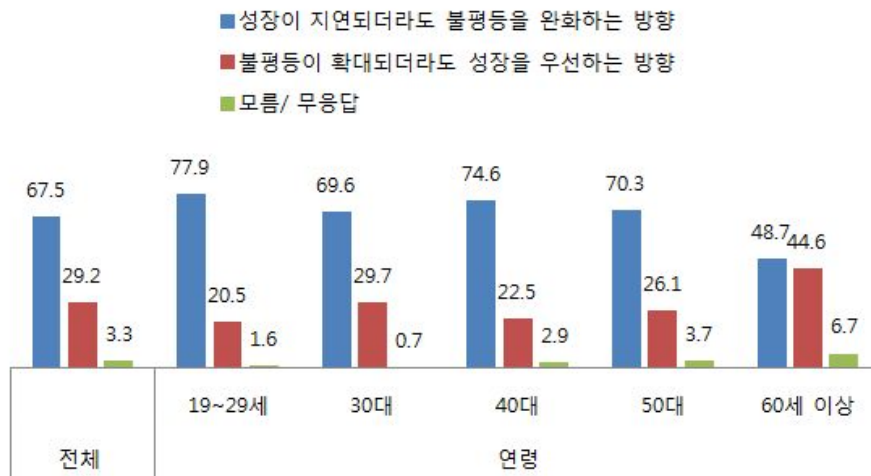
- 내년 총선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할 것 같은 정책으로, ‘일자리정책’이 31.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연금 및 노후 정책’ (21.2%), ‘지역개발 정책’ (11.1%), ‘부동산정책’ (8.9%), ‘교육 정책’ (8.8%) 등으로 응답되었음.
- 남성은 내년 총선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일자리정책’ (32.6%) > ‘연금 및 노후 정책’ (19.5%) > ‘지역개발 정책’ (13.4%) 순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했음. 여성은 ‘일자리정책’ (30.1%) > ‘연금 및 노후 정책’ (22.9%) > ‘교육정책’ (9.6%) 순으로 나타나 ‘교육정책’이 중요한 투표 기준임을 알 수 있음.
- 연령별로는 19~29세에서는 ‘일자리정책’ (45.2%) > ‘연금 및 노후 정책’ (11.8%) > ‘부동산정책’ (9.1%) 순으로 응답되어 ‘일자리정책’이 후보 선택의 주요 기준임이 확인됨.
- 30대는 ‘연금 및 노후 정책’ (20.7%)과 ‘일자리정책’ (20.4%)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난 가운데 ‘부동산정책’ (15.0%)이 그 다음으로 높았음.
- 40대는 ‘일자리정책’ (29.1%) > ‘연금 및 노후 정책’ (23.6%) > ‘교육정책’ (14.9%) 순으로 나타나 ‘교육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됨.
- 50대는 ‘일자리정책’ (32.0%) > ‘연금 및 노후 정책’ (20.8%) > ‘지역개발 정책’ (14.3%) 순이었으며, 60세 이상에서는 ‘일자리정책’ (30.9%) 다음으로 ‘연금 및 노후 정책’ (27.1%)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서울은 ‘일자리정책’ (28.3%) > ‘연금 및 노후 정책’ (20.2%) > ‘부동산정책’ (18.4%) 순으로 나타나 ‘부동산정책’에 대한 요구가 다른 지역보다 높음을 알 수 있음.
- 지방으로 갈수록 ‘일자리정책’과 ‘지역개발 정책’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3. 정책 평가

□ 경제정책 방향 평가

<그림 10> 경제정책 방향 평가

우리나라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다음 중 어느 쪽 입장에 더 가까우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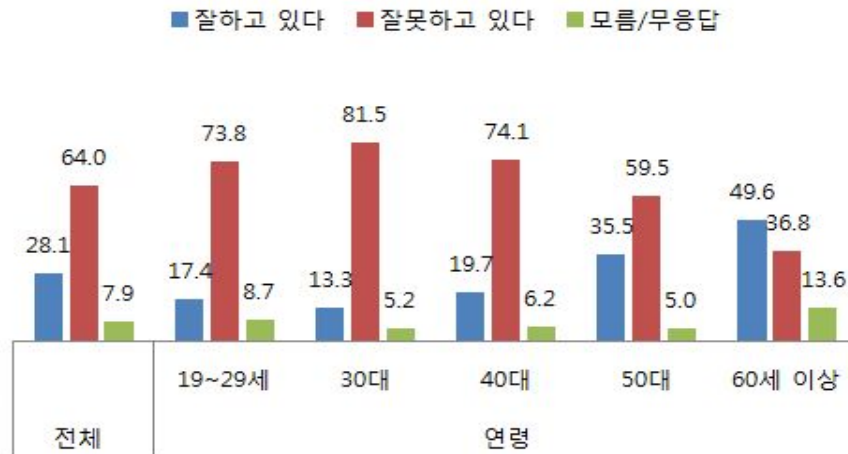


- 우리나라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성장이 지연되더라도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응답이 67.5%, ‘불평등이 확대되더라도 성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29.2%로 나타나 ‘불평등 완화’ 의견이 월등히 우세했음.
- ‘성장이 지연되더라도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응답은 성, 연령, 직업, 귀속 계층 등에 관계없이 매우 높게 나타난 가운데,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성장 우선에 대한 요구가 다른 연령층보다 높음이 확인됨.
- 귀속 계층별로 보면 중층에서 불평등 완화 요구가 70.8%로 가장 높았고, 중하층(68.8%) > 상층/중상층(67.7%) > 하층(58.8%) 순으로 불평등 완화 요구가 높았음.

□ 부동산정책 평가

<그림 11> 부동산정책 방향 평가

부동산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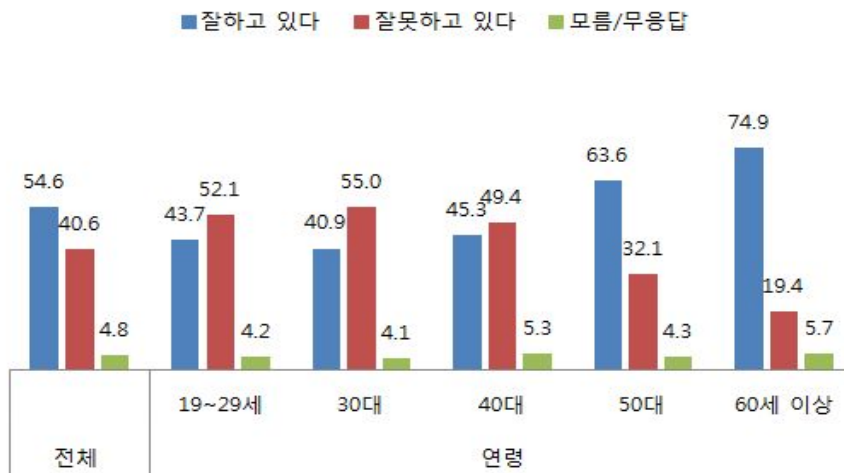


- 정부 여당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8.1% (‘매우 잘하고 있음’ 2.5%+ ‘잘하는 편’ 25.6%),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4.0%(‘잘못하는 편’ 42.4%+ ‘매우 잘못하고 있음’ 21.6%)로, 부정평가가 매우 높았음.
- 남성보다 여성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에서 부정평가가 81.5%로 매우 높았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71.0%로 부정평가가 특히 높은 가운데, 서울 (67.2%) > 경기/인천 (66.1%) > 대전/충청 (65.7%) 순으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남. 부동산정책에 관심이 높은 수도권에서 부정평가가 특히 높게 나타남.

□ 대북정책 평가

<그림 12> 대북정책 평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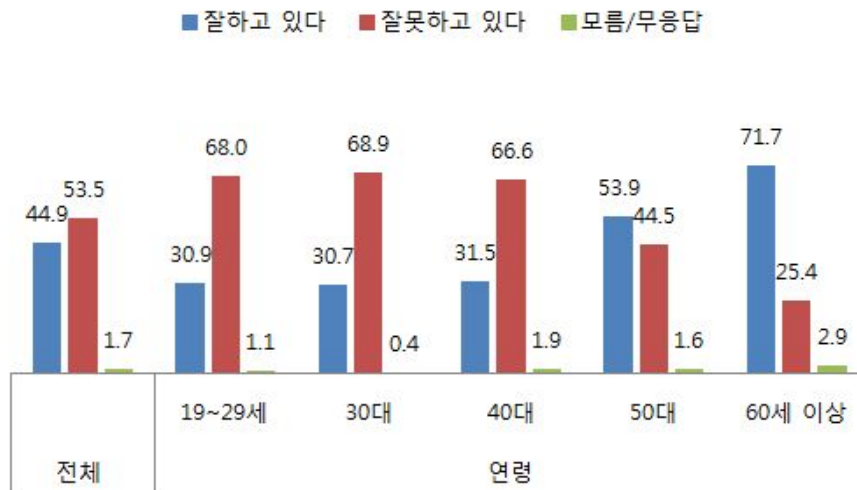


-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54.6%(‘매우 잘하고 있음’ 8.4%+ ‘잘하는 편’ 46.2%),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0.6%(‘잘못하는 편’ 29.1%+ ‘매우 잘못하고 있음’ 11.5%)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14.0%p 높았음.
- 연령별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남. 60세 이상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74.9%로 특히 높게 나타났고 50대 에서도 63.6%로 과반을 상회했음. 하지만 40대 이하에서는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북정책에 대해 부정 평가보다 긍정 평가가 우세했음.

□ 안전정책 평가

<그림 13> 안전정책 평가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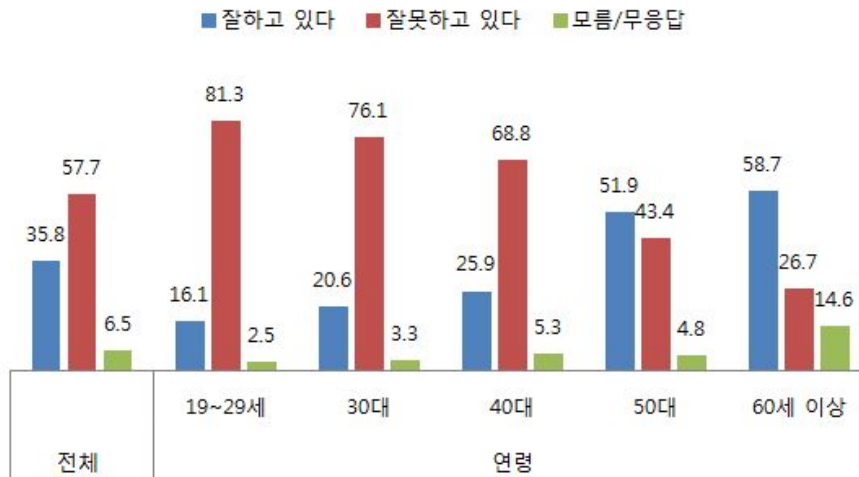


- 우리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4.9%(‘매우 잘하고 있다’ 4.0%+ ‘잘하는 편이다’ 40.8%),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3.5%(‘잘못하는 편이다’ 33.0%+ ‘매우 잘못하고 있다’ 20.4%)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다소 우세했음.
- 여성(55.0%)이 남성(51.9%)보다 정부의 생명과 안전 보호 역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
- 저연령층으로 갈수록 부정평가가 높았으며, 50대 이상에서는 긍정 평가가 더 우세해 세대별 인식차가 매우 컸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과반을 상회했음.

□ 노동정책 평가

<그림 14> 노동정책 평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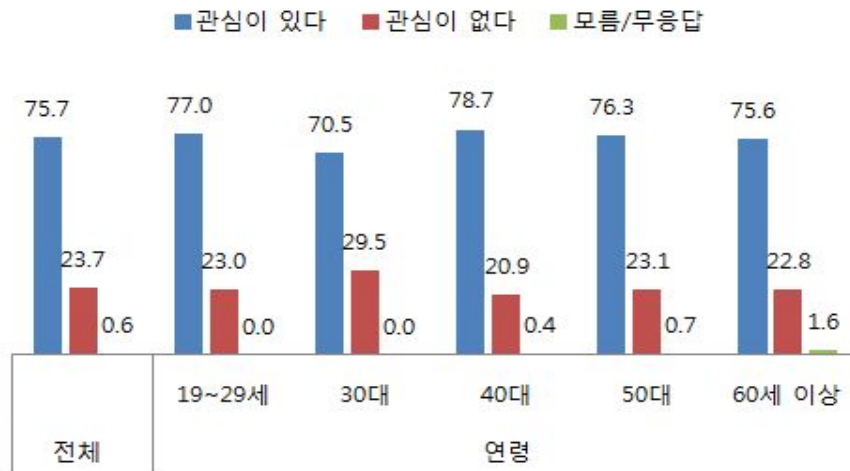
-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5.8%(‘매우 잘하고 있다’ 4.9%+ ‘잘하는 편이다’ 31.0%),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7.7%(‘잘못하는 편이다’ 39.2%+ ‘매우 잘못하고 있다’ 18.5%)로, 부정평가가 더 높았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9세에서 부정평가가 81.3%로 특히 높았음. 그 외 30대(76.1%), 40대(68.8%) 순으로 부정평가가 높았고, 50대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 세대별 인식차가 극명히 나타남.
- 직업별로는 학생(76.8%)과 화이트칼라(75.6%)층에서 부정평가가 특히 높았음.

4. 국정교과서 이슈분석

□ 국정교과서 관심 정도

<그림 15> 국정교과서 관심 정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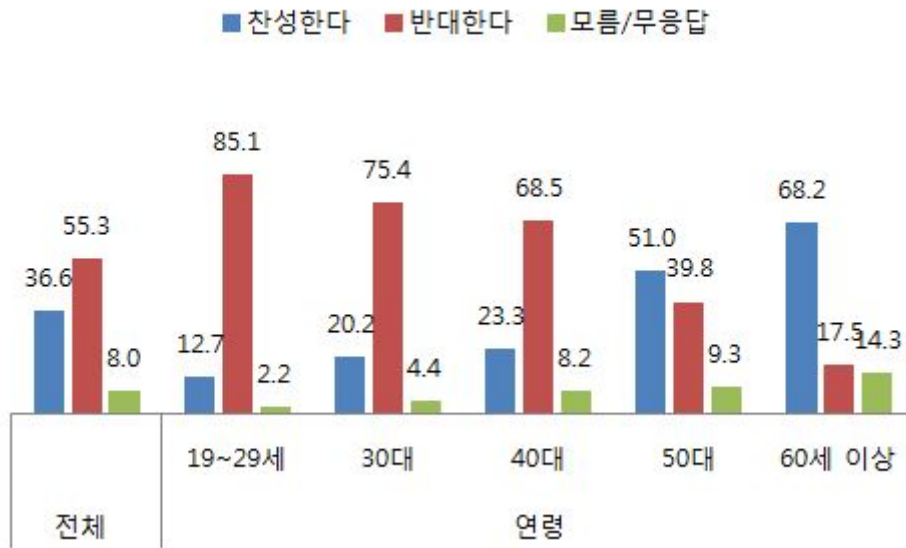


-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관심이 있다’ 라는 응답이 75.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매우 관심’ 36.4%+ ‘비교적 관심’ 39.3%).
- 남성(76.6%)이 여성(74.9%)보다 관심이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 (78.7%)의 관심도가 가장 높았음.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관심 정도가 각각 80.2%, 79.4%로 나타나 보수층(72.4%)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과 경기/인천, 서울 77.1%, 광주/전라 76.7% 등에서 관심 정도가 전체 평균을 상회했음.

□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견

<그림 16>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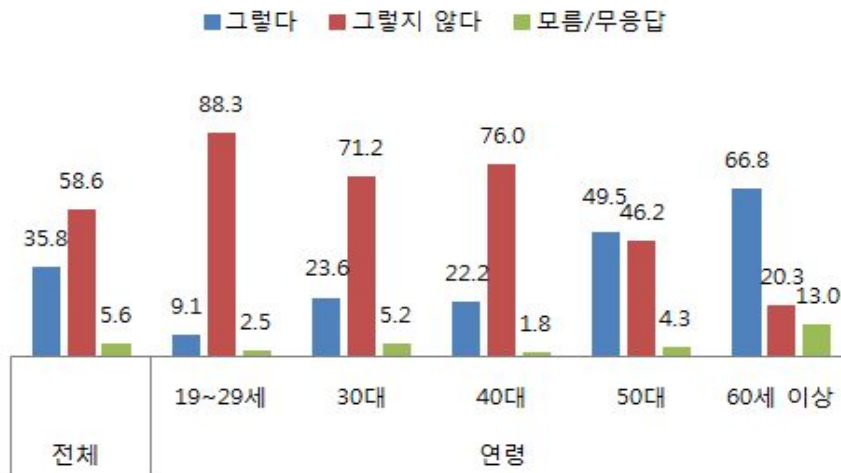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반을 질문한 결과, ‘반대한다’가 더 높았음. ‘찬성한다’는 응답은 36.6%(‘매우 찬성’ 13.5%+ ‘찬성하는 편’ 23.1%), ‘반대한다’는 응답은 55.3%(‘반대하는 편’ 23.3%+ ‘매우 반대’ 32.0%)였음.
- 여성(53.8%)보다 남성(56.9%)에서 반대 의견이 더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 의견이 높았음. 40대 이하에서는 반대, 50대 이상에서는 찬성 등 세대별 인식 격차도 명백히 나타났음.
- 지역으로는 대구/경북에서만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더 높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찬성 의견이 과반에 못 미쳤음.

□ 국정화 도입 시 균형 있고 올바른 역사 서술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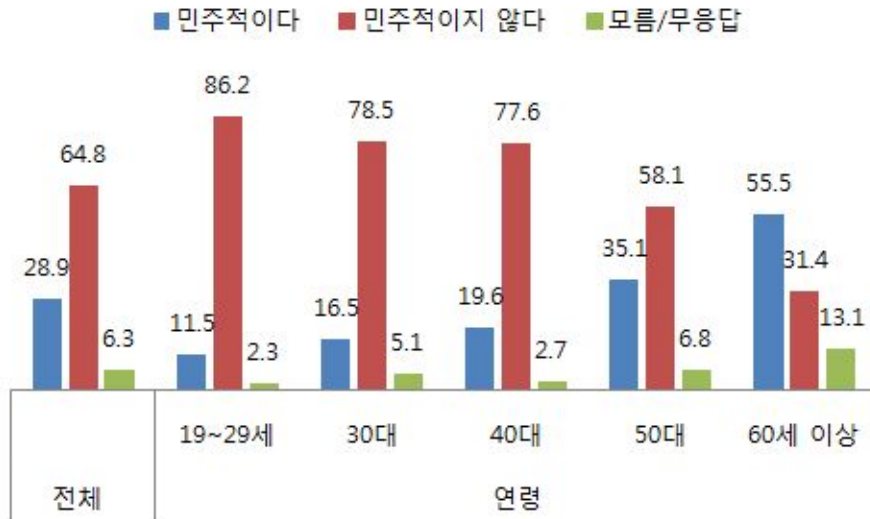
<그림 17> 국정화 도입 시 균형 있고 올바른 역사 서술에 대한 기대감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되면 균형 있고 올바른 역사 서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될 경우 균형 있고 올바른 서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감을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긍정적 답변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이 월등히 높았음. ‘그렇다’는 응답은 35.8%(‘매우’ 14.9%+ ‘다소’ 20.9%),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8.6%(‘별로’ 25.7%+ ‘전혀’ 32.9%)였음.
-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의 저연령층에서는 부정적 전망이, 50대 이상에서는 긍정적 전망이 우세해 인식 격차가 큼이 확인됨.
- 지역으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정적 의견이 더 우세했음.

□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의 민주성 평가

<그림 18>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의 민주성 평가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에서는 ‘민주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음.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 대해, ‘민주적이다’는 응답은 28.9%(‘매우 민주적’ 5.0%+ ‘비교적 민주적인 편’ 24.0%), ‘민주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64.8%(‘별로’ 32.3%+ ‘전혀’ 32.5%)였음.
- 연령층이 낮을수록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가운데 50대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나 주목됨.
-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남. 특히 보수적인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 주목됨.

III. 결론

- 정당의 지지 이유로 새누리당은 능력과 추진력,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가치와 노선이 주요 응답으로 꼽힘. 국민들이 정책능력면에서 야당보다 여당을 더 높게 평가하고, 이것이 보수 여당의 높은 지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번 조사에서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압도적으로 높게 꼽힌 가운데, ‘정치개혁’이 두 번째 높게 응답됨. ‘일자리 문제’는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절박한 과제임이 확인됨. 정치개혁 없이 우리사회의 산적한 과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특히 남성층에서 ‘정치개혁’을 ‘일자리 문제’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의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됨.
-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에서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특히 높았다는 점이 특징적임. 청년실업 문제 못지않게 은퇴가 현실적 문제로 닥친 50대에게 ‘일자리 문제’가 매우 절박한 문제임이 확인됨.
-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지방으로 갈수록 ‘일자리 문제’를 더 시급한 해결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음.
- 직업별로는 자영업층에서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 못지않게 ‘경제성장 지속’을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어 경제위기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층의 위기의식을 확인할 수 있음.
- 무당파층과 중도층 모두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나 ‘정치개혁’에 대한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주목됨. 내년 총선에서 중도, 무당파층의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치혁신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득력 있는 플랜 제시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임.

-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공정성과 정의가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부상해왔음. 어느 분야에서 불공정성이 가장 극심한지에 대한 인식은 어느 분야에서 변화가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음. 우리사회에서 가장 공정하지 못한 분야를 질문한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이 가장 높은 응답을 얻은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로 인한 불공정’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20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음. 이는 20대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인 일자리의 문제로서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은 물론 취업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 등을 모두 아우르는 문제라 할 수 있음.
- 30대는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로 인한 불공정’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음. 자신의 노력에 의해 획득 가능한 소득과 달리 자산은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것임. 우리사회에서 경제적 격차의 발생은 소득보다 자산에 의한 측면이 크며 30대에게 이 문제는 가장 인화성이 큰 문제임이 확인됨.
- 40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 문제가 모든 연령층 등 가장 높았음. 이는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취업을 앞둔 자녀세대의 문제라는 측면에서도 의미심장함.
- 자영업층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이 비슷하게 가장 높게 나타남.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에 대한 불안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임.
- 중도층과 무당파층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이 가장 높은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로 인한 불공정’ 문제가 전체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은 각자가 처한 삶의 불안 요소들을 해결하는 데서 나오게 됨. 이번 조사에서 개개인이 직면한 최우선 불안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노후 불안’이 가장 높은 가운데, ‘고용 및 일자리 불안’, ‘빚 등 가계 부채 불안’이 뒤를 이었음.

- 20대는 ‘고용 및 일자리 불안’ 과 ‘집값 전세값 상승 등 주거 불안’ 이 가장 높았음.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젊은층의 불안이 이 두 가지로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 주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을 알 수 있음. 대졸 이후 일자리를 갖기까지 지체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 속에서 이행기에 있는 20대 후반 청년층의 불안이 경제적 불안을 넘어, 연애·결혼·출산 등 여러 측면으로 확산되고 있음. 이행기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이 요구되며, 이는 단지 일자리정책을 넘어 주거, 채무 등을 포함한 사회정책이어야 할 것임.
 - 30대는 ‘노후 불안’ 에 이어 ‘전세값 상승 등 주거 불안’ 이 매우 큼. 이 층은 부동산, 주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연령층으로 특히 전세값 상승으로 불안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40대는 ‘노후 불안’ 과 ‘자녀교육 불안’ 이 가장 높게 나타남. 자녀교육은 사교육비 문제, 취업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얹힌 문제임.
 - 50대 이상에서는 ‘노후 불안’ 외에도 ‘건강 불안’ 이 높게 나타남.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육체적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함.
 -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에서는 ‘주거 불안’ 이, 광주/전라 지역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등 지방으로 갈수록 ‘일자리 불안감’ 이 큼이 확인됨.
 - 자영업층은 ‘노후 불안’ 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자영업 종사자들이 고용위기에 직면한 40대 이상이 다수로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노후 불안’ 을 특히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 내년 총선 후보 선택 시 고려 정책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 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금 및 노후 정책’ 으로 나타남.
 - 20대는 ‘일자리정책’ 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19~35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2015년 8월)에 따르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 (60.5%)가 ‘임금 등 소득이 높은 일자리’ (39.5%)보다 월등히 높았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고 중요함.
 - 30대는 ‘일자리정책’ 과 ‘노후정책’ 이 비슷했고 ‘부동산정책’ 에

대한 욕구가 타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임. 30대는 주거 불안으로 인해 부동산정책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40대는 ‘일자리정책’ 과 ‘노후정책’ 이 가장 높았음.
- 주목할 만한 것은 50대 이상에서도 노후보다 ‘일자리정책’ 에 대한 욕구가 더 높았다는 점임. 가장 중요한 노후정책으로 일자리 정책을 꼽고 있음이 확인됨.
- 자영업층은 ‘일자리정책’ 다음으로 ‘지역개발 정책’ 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지역개발에 대한 높은 욕구는 성장에 대한 욕구와 맞닿아있으며, 경제 불안에 기인하는 측면이 큼.

※ 연령별, 계층별 정책수요 종합 분석

		우리사회 시급한 과제	가장 공정하지 못한 분야	삶의 불안 요인	총선 후보 선택 시 고려 정책
전체		일자리, 정치개혁 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로 인한 불공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순	노후 불안이 가장 높은 가운데, 고용 및 일자리 불안, 빚 등 기계 부채 불안 순	일자리정책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금 및 노후정책으로 나타남
연령	20대	일자리 요구 특히 높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 특히 높음	고용 및 일자리 불안과 집값 전세값 상승 등 주거 불안	일자리정책이 압도적
	30대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로 인한 불공정	노후 불안에 이어 전세값 상승 등 주거 불안이 매우 큼	일자리와 노후정책이 비슷했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욕구가 타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남
	40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성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음	노후 불안과 자녀교육 불안	일자리정책과 노후정책
	50대	일자리 요구 특히 높음		노후 불안 외에도 건강 불안	노후보다 일자리정책에 대한 욕구가 더 우세
	60대 이상			노후 불안 외에도 건강 불안	노후보다 일자리정책에 대한 욕구가 더 우세
지역	서울			노후 불안 외에도 전세값 상승 등 주거 불안이 전 지역 중 가장 높음	
	광주/			노후 불안 외에도	

	전라			일자리 불안이 높음	
	대구/ 경북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			
	부산/ 울산/ 경남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		노후 불안 외에도 일자리 불안이 높음	
	강원/ 제주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			
직업	자영 업층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 외에도 경제성장 지속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성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성	노후 불안이 압도적으로 높음	일자리정책, 지역개발 정책 순
정치 성향	중도 층/ 무당 파	일자리 문제 외에 정치개혁에 대한 응답이 특히 높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성,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로 인한 불공정 문제		

- 연령별 : 20대는 일자리, 30대는 주거, 40대는 일자리와 노후 자녀교육 등 복합적, 50대도 일자리와 노후, 60대 이상 일자리와 건강,
- 지역별 : 서울 지역은 주거, 지방으로 갈수록 일자리

- 유권자들의 정책지향을 살펴보기 위해 경제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성장이 지연되더라도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이 성장 우선 의견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대체로 성장과 복지의 관계에서는 성장 우선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데, 성장과 불평등 간의 관계에서는 불평등해소 의견이 높게 나타남. 이는 격차와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성장은 더 이상 국민들 개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임.
- 정부 여당의 정책을 부동산정책, 대북정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 노동정책 네 분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대북정책만이 긍정평가가 유일하게 과반을 상회하는 분야로 나타났음. 그 외 안전정책(44.9%), 노동정책(35.8%), 부동산정책(28.1%)순으로 평가가 높게 나타남.
- 대북정책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50대 이상의 긍정평가와 40대 이하의 부정평가가 엇갈리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책에서는 40대 이하 연령층의 부정평가와 50대 이상 연령층 간 긍정평가로 양극화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인식 및 정부의 사후 대책에 대한 평가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노동정책과 부동산정책은 긍정평가가 대통령지지도에 못 미치는 낮은 평가를 받음. 부동산정책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연령층은 30대>20대>40대 순이었음.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부정적 평가가 특히 높았음.
- 노동 정책은 당사자층인 20대에서 긍정평가가 16.1%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지난 8월 한겨레경제연구원 조사에서는 임금피크제는 찬성하면서 이것이 일자리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는데,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임.

※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 70.3%, ‘반대한다’ 29.7%로 나타나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75.3%가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함.

- 국정교과서 이슈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적잖은 가운데, 국정교과서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찬성 36.6%, 반대 55.3%로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았음. 국정교과서 논란이 일던 초기 국면에서는 찬성 여론이 다소 우세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반대 우위의 여론이 굳어지고 있음이 확인된 셈임. 특히 국정교과서 이슈에 관심이 높은 층일수록 반대가 58.8%로 완강해져 향후에도 국정교과서에 부정적인 여론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세대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 4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이고, 50대 이상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음. 찬성 여론은 20대 12.7%, 30대 20.2%, 40대 23.3% 수준에 그친 반면, 50대와 60대에서는 각각 51%, 68.2%였음. 지역별로는 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찬성 53.5%, 반대 43.5%로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50% 이하에 그쳤음. 특히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찬성 42.5%, 반대 47.9%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나 주목됨.
- 이념성향별, 지지정당별로도 의견차이가 컸음.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반대가 각각 73.2%, 65.2%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었지만 보수층에서는 찬성 63.3%, 반대 29.7%로 찬성이 우세했음. 국정교과서 이슈에 대해 진보층과 중도층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반면 보수층은 고립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결과임.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층까지도 반대 21.6%, 찬성 66.9%로 국정화 반대 입장에 가담하고 있었음.
- 이번 조사에서는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찬반의견 뿐만 아니라 이슈에 대한 관심 여부도 질문했음. 이슈에 대한 관심도는 이슈의 지속성, 파급력과 직접적 관련을 가지기 때문임. 조사 결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75.7%로 나타났으며 이중 ‘매우 관심이 있다’는

응답도 36.4%로 비교적 높았음. 연령별로 보면 교육이슈의 핵심 관여층인 40대(78.7%)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고 20대, 50대, 60대 이상에서도 관심도가 75%를 상회했음. 역사교과서 문제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도 관심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이미 이념 갈등적 이슈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임.

-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80.2%), 중도(79.4%), 보수(72.4%) 순으로 관심도가 높았고 여당지지층보다 야당지지층이 높은 관심을 보였음. 한편 국정교과서 이슈에 관심이 있는 층만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살펴보았을 때는 찬성 38.4%, 반대 58.8%로 반대가 더 높았음. 이른바 고관심 고관여층으로 갈수록 반대가 높다는 것은 향후에도 반대 여론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시사함.
- 역사교과서에 대한 기대감을 내용과 추진 방식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봄.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되면 균형 있고 올바른 역사 서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이 58.6%였고 ‘그렇다’는 긍정적 의견은 35.8%에 그쳤음.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다’ 64.8%, ‘민주적이다’ 28.9%로 부정적 의견이 더 높아졌음. 국정교과서 추진에 동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막상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층이 적잖음을 시사하는 대목임.
- 이번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50대의 여론임. 50대는 보수성이 강해 국정교과서에 대해 대체로 찬성 의견(51%)이 높았음. 하지만 국정교과서 도입으로 올바른 역사서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는 49.5%로 하락했고, 추진방식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대목에서는 긍정평가가 35.1%로 푹 떨어졌음. 50대에서도 국정교과서에 대한 긍정 여론이 취약함을 보여주는 대목임. 향후 국정교과서 집필진 선임 등 추진 과정 등 논란이 일 경우 우호적 여론이 더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부 록 1]

정책수요조사 설문지

■ 정책수요조사 설문지

선문1. 선생님께서 현재 사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세종시 포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선문2. 선생님의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시나요?

- ① 만19~29세 ② 만30세~39세 ③ 만40세~49세
④ 만50세~59세 ⑤ 만60세 이상

선문3.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I. 전반 평가

1. 선생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을 잘했다고 보십니까?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잘했다 ② 비교적 잘한 편이다
③ 약간 잘못된 편이다 ④ 매우 잘못했다
⑤ 모름/무응답

2.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가장 지지하십니까?

- ① 새누리당 ② 새정치민주연합
③ 정의당 ④ 기타()
⑤ 지지정당 없다/모름

3. 선생님께서 (지지 정당)을 지지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① 일을 잘하고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 ② 좋아하고 지지하는 인물이 당에 있기 때문에
- ③ 당이 지향하는 이념과 철학 때문에
- ④ 추진하는 정책이 나에게 필요해서
- ⑤ 내 고향의 민심을 대변하기 때문에
- ⑥ 모름/무응답

II. 정책 평가 및 선호

1.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① 불평등해소
- ② 경제성장지속
- ③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
- ④ 남북관계
- ⑤ 안전한 사회
- ⑥ 정치개혁
- ⑦ 복지확대
- ⑧ 환경문제
- ⑨ 양성평등문제
- ⑩ 기타
- ⑪ 모름/무응답

2.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우리사회에서 가장 공정하지 못한 분야는 다음중 어느 분야라고 보십니까?

- ① 출신에 따른 취업 기회의 불공정

-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 ③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
- ④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로 인한 불공정
- ⑤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교육 기회 양극화로 인한 불공정
- ⑥ 모름/무응답

3. 현재 선생님의 삶에 있어 가장 불안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① 고용 및 일자리 불안
- ② 출산과 육아 불안
- ③ 자녀 교육 불안
- ④ 건강에 대한 불안
- ⑤ 빚 등 가계부채 불안
- ⑥ 집값, 전세값 상승 등 주거 불안
- ⑦ 노후에 대한 불안
- ⑧ 기타
- ⑨ 모름/무응답

4. 그럼, 내년 4월 총선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정책을 가장 많이 고려할 것 같으세요?

- ① 지역개발정책
- ② 일자리정책
- ③ 부동산정책
- ④ 보육정책
- ⑤ 교육정책
- ⑥ 의료정책
- ⑦ 연금 및 노후 정책
- ⑧ 환경정책
- ⑨ 양성평등정책
- ⑩ 모름/무응답

5. 다음 중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십니까?

이와 관련해 다음 중 어느쪽 입장에 더 가까우십니까?

- ① 성장이 지연되더라도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
- ② 불평등이 확대되더라도 성장을 우선하는 방향
- ③ 모름/무응답

6. 전·월세 폭등에 대처해 부동산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 ② 잘하는 편이다
- ③ 잘못하는 편이다
- ④ 매우 못하고 있다
- ⑤ 모름/무응답

7.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 ② 잘하는 편이다
- ③ 잘못하는 편이다
- ④ 매우 못하고 있다
- ⑤ 모름/무응답

8.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 ② 잘하는 편이다
- ③ 잘못하는 편이다
- ④ 매우 못하고 있다
- ⑤ 모름/무응답

9. 임금피크제, 저성과자 해고 등 정부 여당이 ‘노동개혁’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 ② 잘하는 편이다
- ③ 잘못하는 편이다
- ④ 매우 못하고 있다
- ⑤ 모름/무응답

1.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 ① 매우 관심이 있다 ② 비교적 관심이 있다
③ 별로 관심이 없다 ④ 전혀 관심이 없다
⑤ 모름/무응답

2. 선생님께서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한다 ② 찬성하는 편이다
③ 반대하는 편이다 ④ 매우 반대한다
⑤ 모름/무응답

3.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역사 국정교과서가 균형있고 올바른 역사서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① 매우 기대가 된다 ② 비교적 기대가 된다
③ 별로 기대되지 않는다 ④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
⑤ 모름/무응답

4.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민주적이다 ② 비교적 민주적인 편이다
③ 별로 민주적이지 않다 ④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⑤ 모름/무응답

[배경 변수]

1. 자산과 소득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생님의 경제적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상층 ② 중상층 ③ 중간층
④ 중하층 ⑤ 하층 ⑥ 모름/무응답

2. 선생님 스스로의 이념은 진보와 보수 중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 ① 진보 ② 중도 ③ 보수 ④ 모름/무응답

3.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⑤ 모름/무응답

4.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업/임업/어업 ② 자영업 ③ 판매/서비스직 ④ 기능/숙련직
⑤ 일반작업직 ⑥ 사무/기술직 ⑦ 경영/관리직 ⑧ 전문/자유직
⑨ 가정주부 ⑩ 학생 ⑪ 무직/퇴직/기타 ⑫ 모름/무응답

5. 선생님택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 ① 70만원 이하 ② 71~100만원 ③ 101~150만원
④ 151~200만원 ⑤ 201~250만원 ⑥ 251~300만원
⑦ 301~400만원 ⑧ 401~500만원 ⑨ 501~600만원
⑩ 601만원 이상 ⑪ 모름/무응답